

# 몸값 치솟는 안전인력...과로 시달리는 감독인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가져온 명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되면서 안전 인력 확충 수요가 급증한 반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점검·관리를 담당할 감독관은 턱없이 부족,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관리자 ‘귀한 물’=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등은 안전관리자 확충에 적극적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현장 관리자를 두거나 외부 용역업체에 관련 업무를 맡겼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는 전담 조직이나 사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경력자 채용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리 소홀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안전관리자 인력

안전분야 경력자 채용시장 활황 관련 자격증 시험 응시자도 급증

노동부 인력 부족에 관리 어려움 근로감독관 12명이 광주·전남 담당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시공능력평가 200 위권 내 건설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담겨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배치가 필수이다.

현재 안전관리자를 채용 중인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이내의 건설사는 GS건설을 비롯해 포스코·대우·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다수다. 제조업과 유통업계도 안전관리자 모시기에 나서면서 채용 포털 등도 관련 공고가 급증하고 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서 업계에

서는 안전관리자들의 연봉을 500~1000만원 가량 올리며 인력 구하기에 나선 상황이다. 안전관리자들의 이직도 활발하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협의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업무가 과중해지는 점도 있어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도 잇따르는 상태”라면서 “연봉이 높아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현장소장에게 지도와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 관련 전문가 되볼까’ 관련 자격증 인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노동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움직임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4만 170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비슷하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해 3차례에 걸친 필기시험에 2288명(1차 665명→2차 694명→3차 929

명)이 응시했지만 올해는 오는 3월 5일 예정된 1차 시험에만 지난해 전체 응시자의 절반에 이르는 1434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산업안전기사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중 ‘안전’과 관련한 대표적 종목으로 가장 많은 수험자가 지원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 안전관리자가 많이 필요한 만큼 지원자가 꾸준히 몰릴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안전기사 다음으로 지원자가 많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등도 비슷하다.

광주·전남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지난해 3회차까지 1917명이 응시했다. 평균 64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1회 필기시험 응시자는 784명에 달했다. 건설안전기사 응시자도 지난해 총 1187명이 응시해 평균 400명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 필기시험에는 613명이 응시한 상태다.

◇노동부 산업인력 감독인력 역부족=고용노동부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수사 인력은 제한적인데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업무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6일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중대재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12명이다.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총 3126곳(주지역 1429개 전남지역 1697개). 근로감독관 한 명 당 260곳의 사업체를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수사 대상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 전문인력은 부족은 심각성이 더하다. 수사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산업안전감독관은 총 814명(정원)으로, 최근 2~3년 사이 2배 이상 규모가 늘었지만 고용부 안팎에선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김광균 민주노동당 광주지역본부 선전국장은 “산재재해 발생시 현재 근로감독관의 인원과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전조사와 사고 발생시 대응·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노동자·노동조합과 함께 민관합동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현장실습생 사망’ 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안전의식 경각심 준 판결 해석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은 군 사고와 관련,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미성년자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이 지난 2020년 5월 광주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심리했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한 경우가 1건(징역 1년 실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재해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5단독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요트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여수시 이순신마

리나 내 계류장에서 스쿠버 자격·경험이 전혀 없는 홍군에게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고 스쿠버 잠수작업을 시키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홍군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부장판사는 “현장실습생에게 위험하고 전문적 잠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용서받지 못했고 사업상 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주로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지의문”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홍군 아버지 홍성기씨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합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지의문이 없고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 8-3부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비교해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벌금형 100만원만 제외됐다. 지씨는 1·2심 모두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선 분명히 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가 지칭한 ‘광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따뜻한 목도리 나눔 16일 광주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목도리 나눔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동캠프지기, 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지역의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나눠줄 목도리를 제작해 포장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 민간공원 관련 공무원 4명 중 3명 무죄

허위공문서 1명만 벌금 500만원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게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중태 전 행정부시장과 운영열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임의로 자신의 해석을 쓴 혐의를 적용 받았다. 사무관 B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하기 위해 감독권을 남용해 표적 감사를 하고 보고서 등을 유출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최종 선정이 끝나고 이 용섭 광주시장이 감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통화한 뒤 과정을 살펴보고도 지시한 점 등을 보면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의심되지만,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2018년 1월 1단계에 이어 2018년 11월 2단계로 중앙 1·2지구 등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공정성 시비, 제안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특정감사를 통해 중앙 1지구 사업자를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 사업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피스텔 신축 부지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대지 15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 매매가-평당 1200만

소유자. 010-3605-5000

##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